

2023년도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I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어업관리단은 1966년 수산청 어업지도관실로 출범하여 동·서·남해 3개 어업관리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 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어업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및 준법조업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등 어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2020년 이후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로서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 어업 간 분쟁조정 등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20.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2023. 10. 23.~ 10. 27.(5일간), 감사담당관 외 4명

4. 감사 중점사항

-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국내 어업분쟁 예방 및 조정, 한일·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적정성
- 지난 감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1. 국가어업지도선 피항 관리 업무 소홀

○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규칙」 제21조의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 피항기준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시 500톤급 이하는 피항 하고, 500톤급 이상 지도선은 현지기상을 고려하여 단장에게 보고 후 피항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규정과 관련하여 '20년도 정기종합시 '불필요한 피항 및 피항 미승인' 등의 사유로 무궁화 18호 및 25호 선장에게 중징계 처분한 바 있으며, '22.9월 남해단에서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사례*(피항 미승인 14회(5척), 승인 전 자체 피항 1척)를 추가 지적하였으나 별도 조치없이 전직원 직무교육만 실시하고 종결하였음

* (남해단) 무궁화 4호(2건), 12호(3건), 18호(6건), 25호(2건), 38호(2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단은 금번 정기감사시 위반사례 4건*이 추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3건은 남해단 종합상황실에서 피항보고 승인을 누락 또는 지연하여 미승인, 1건은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23년 종합감사 추가 확인) 무궁화 18호(1건), 25호(2건), 40호(1건)

- ➡ **(신분상)** '20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 등 피항 승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 요구(경고1)
- ➡ **(행정상)** 22년 남해단 자체점검시 피항미신청 및 승인 누락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후속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 처분(기관주의1)

2. 청사신축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비 집행 부적정

○ 남해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청사 신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청사 지붕층에 관급자재로 설치 하는 것으로 2019. 12.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 총사업비가 부족하여 태양광 발전장치를 제외하고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추후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 확보 후에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를 계약하여 설치하기로 하였음

가. 태양광 발전장치 기초패드 앵커볼트 설치공사 전시공 추진 부적정

- 남해단은 2021. 2. 경 청사시설 신축공사 공정이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이르렀으나,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 준공 전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태양광 발전장치 기초패드 앵커볼트 설치를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예정 업체에게 전시공 의뢰하였음

* 앵커볼트를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구멍을 뚫어 설치할 경우, 구조물 지지력 확보 곤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 앵커볼트 전시공 공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 및 설치예정 업체와 조달청 간 계약 금액에는 앵커볼트 자재 및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앵커볼트 설치 공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총사업비 조정 후 관급자재 계약 및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전시공 분 공사비가 포함된 관급자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남해단은 총사업비 조정이 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 및 설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앵커볼트 전시공 공사비를 사후에 예산 확보하여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예정 업체과 앵커볼트 전시공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1. 3. 4. 준공검사 후 공사비 14,850천 원을 지급

2) 앵커볼트 전시공 공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 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건물, 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 청사시설 신축의 예산과목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의 건설비 중 '공사비'(420-03목)에 해당되므로,
-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청사시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 예산과목의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남해단은 총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 14,850천 원을 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210-09목)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나.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비 부당 지급

1) 이중 지급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 미환수

- 남해단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21.12.21.)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 예정금액에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 14,850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감액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감액 전 금액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 남해단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는 업체와 나라장터 간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 우선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가 포함된 상태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음('22.1.20. 389백만원)
- 이후 남해단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가 마무리되어 가는 '22. 6. 경에 관급자재 계약업체에게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 14,850천 원을 환수받아 세입 조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 업체는 회계연도 변경 등 회사 사정상 선시공분 공사비 환수는 곤란하고, 대신에 해당 금액만큼의 전기공사 또는 태양광 예비패널을 남해단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 남해단은 추가적인 전기공사 또는 태양광 예비패널이 불필요하여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따라서 남해단은 관급자재 계약업체로부터 이미 지급한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를 환수하거나, 준공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
- 그런데 남해단은 공사비 환수 또는 감액(14,850천원) 대신 신청사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동 금액만큼의 운동기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업체에게 문의하였고,
 - * 남해단은 청사 신축 시 예산 부족으로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운동기구 중 일부는 자산취득비로 구매(26,090천원)하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계약업체로부터 받기로 함
-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에 14,850천 원에 해당하는 운동기구 구입비 견적을 받아, 관급자재 계약업체에게 전달하여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한 후에 운동기구를 납품받아 사용 중
- 그러나 남해단이 이중으로 지급한 앵커볼트 선시공분 공사비 14,850천 원을 환수 또는 감액하는 대신에 납품받은 운동기구 대금을 실제로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결제하기로 했던 14,850,000원 보다 106,800원이 적은 14,743,2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됨(전자세금계산서)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물품 취득 누락

-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운동 기구는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430-01목)로 구매하여야 하고, 실제로 ‘22. 6. 8. 구매한 운동기구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물품으로 취득하여 관리 중
- 그런데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대신 결제하고 남해단이 납품받은 운동기구는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어야 하는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공사비(420-03목) 14,850천 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운동기구를 구매한 것에 해당함

- 아울러 동 운동기구는 현재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물품으로 취득되지 않은 채로 운용되고 있어 주기적인 재물조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분실·훼손 및 도난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없는 실정임
- ➔ **(행정상)** 환수대상 금액 14,850,000원과 실제 운동기구 결제대금 14,743,200원의 차액 106,800원을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계약 업체로부터 회수 요구(시정1)
- ➔ **(행정상)** 관급자재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운동기구를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물품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통보1)
- ➔ **(신분상)**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고, 이중 지급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비 14,850천 원을 환수하는 대신에 업체로부터 해당 금액 만큼의 운동기구를 받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 요구(경고3)

3.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서해단)

- 남해단 소속 직원 3명은 '20.11월부터 '23.10월 현재까지 총 3건의 징계처분(보안업무규정 위반, 공무집행방해 / 견책2, 감봉1)을 받았음
- 우리부 '2023년도 성과급 지급계획'Ⅱ, [5]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을 미지급토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해단*은 ◇◇◇◇ ◇◇◇◇이 '22.2.7. 징계처분(견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성과연봉 등급을 A로 결정하고 '23년 연봉에 성과연봉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

* ◇◇◇◇ 전문관은 '22.3.10 남해단에서 서해단으로 전출

** 성과수당 5,631천 원 중 3,942천원을 기지급

- ➔ **(행정상)** 징계처분자에게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약3,942천원)하고 '23년 연봉을 재산정 요구(시정1-서해단)
- ➔ **(신분상)**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성과연봉을 제외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2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요구(주의2-서해단)

4.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 등에 따라 남해단 지도선 직원들은 지도선 입출항 보고시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 및 수령하고 있고,

어업지도선 직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출동기간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비 고
합계 (7박 8일 출동)	합계 113시간 (7시간+96시간+10시간)	
출동 출항일(1일)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점심시간) + 6시간(18시~24시) * 통상 오전 10시에 출동 출항
출동 중(6일)	16시간 (6일×16시간= 9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시간(00시~09시) + 1시간(점심시간) + 6시간(18시~24시) * 정규근무시간 8시간(09시~18시) 제외
출동 입항일(1일)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시간(00시~09시) + 1시간(점심시간) * 15시 이후 입항 기준 정규근무시간(09시~15시) 제외
* 시간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출동 중 야간근무시간 8시간(22:00~06:00)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인정받으며, 출동 중 공휴일에 근무하는 9시간(09:00~18:00)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 인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시 전액 환수 조치 및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자체점검 결과 처분 부적정

- 어업지도선이 출동업무를 종료하고 점심시간(12:30~13:00) 전(중)에 입항하는 경우 해당 일의 점심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불가
 - * 2020. 11. 남해단 종합감사 시 **무궁화27호** 포함 대부분의 지도선이 출동 종료일의 점심시간 이전 또는 점심시간 중에 입항하였으면서도 점심시간 이후에 입항한 것으로 보고하고,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 그런데 종합감사 직후인 '21. 1. 1. **무궁화27호**(17명)는 출동 종료일 12:30에 입항하였으면서도 13:00까지 출동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신청('21.2.4.)하여 수령
 - * 종합감사 이후 '22. 10. 남해단 자체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으로서 당시 부당 수령한 수당만 환수하였으나, 종합감사 당시 적발(선장 '주의' 처분)된 사항과 같은 유형으로 감사 직후에 재차 부당 신청 및 수령한 사항이므로 관련자 신분상 처분 필요

나. 자체 점검 및 복무교육 실시 이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 남해단은 종합감사 처분 이후 자체점검 실시 결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가 적발되자 자체 복무교육 실시
- 그런데 감사기간 중 항해일지 및 입·출항보고서 상의 입·출항시각과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류 상의 입·출항시각을 대조한 결과, 실제 입·출항시각과 다르게 시간외근무시간을 부당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 확인

실제 입·출항시각과 다르게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지도선	입·출항일	입·출항시각			시간외근무 부당 산정시간	지급 인원 및 시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액(원)
		실제 입·출항시각 (항해일지)	입·출항 보고시각 (전문보고)	수당청구 시 입·출항시각			
무궁화 3호	'22.09.07.	08:40(입)	09:00(입)	09:00(입)	08:00~09:00 (1시간)	12	131,840
무궁화 4호	'22.11.08.	12:50(입)	12:50(입)	13:00(입)	12:00~13:00 (1시간)	16	175,840
무궁화31호	'23.04.10.	18:10(출)	18:10(출)	14:00(출)	18:00~19:00 (1시간)	14	151,580
무궁화40호	'22.12.12.	17:20(출)	17:20(출)	09:00(출)	12:00~13:00 (1시간)	16	181,590
무궁화40호	'23.06.23.	15:10(출)	15:10(출)	09:10(출)	12:00~13:00 (1시간)	19	215,780
합 계						77	856,630

- ➔ **(행정상)**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856,530원)을 회수하고, 수당내역 작성자와 이를 결재한 선장에 대해 가산금(473,900원) 징수 요구(시정)
- ➔ **(신분상)**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부당하게 작성한 담당자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선장 등 관련자(9명)에 대하여 “경고”, “주의” 처분 요구(경고3, 주의6)

5. 불법어업 단속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보조금 미징수

- 남해단은 '20. 11.부터 '23. 10. 현재까지 불법어업 어선을 단속하여 관할 시·군·구에 총 224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음
- 「수산업법」 제99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어업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단속기관)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과징금 총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규정
- 그런데 남해단은 '20.11.부터 '23.10.까지 과징금 부과액 총 182.8백만 원 (128건) 중 부과액의 30%인 보조금 약 54.8백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약 29.2백만 원(52.1%)만 지급받고 있음

➔ **(행정상)**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25.7백만 원을 조속히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요구(통보1)

6. 국가어업지도선 지도·단속업무 인센티브제도 운영 부적정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210-16)의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격려 용도로 사용하되, 법령상 근거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 및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남해단은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격려 포상금(5년간 53백만원)을 집행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전체 12척에 배분되도록 지급하였고, 지도선 간 차등지급 최소를 위해 당초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지급 등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함
- 한편, 3개 어업관리단의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인센티브 지급여부 및 방법 등이 당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부 총괄부서(지도교섭과)에서는 동 제도의 운영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3개 어업관리단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행정상)** 기타운영비(210-16목)로 격려금 지원시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경고” 처분 (기관경고1)

- ➡ **(행정상)** 3개 어업관리단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인센티브 제도'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통보1, 지도교섭과)

7. 어선중개업 등록 관리 개선 필요

-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업관리단은 어선중개업 등록 관리, 어선중개업의 어선 중개사항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등의 요건 발생시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선거래시스템에서는 어선중개업체의 보험 가입유무, 영업정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어선거래의 편법, 음성적 거래, 거래자의 거래 중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래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제도적 보완 검토 필요
- 또한,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는 장기 보험 미가입 어선중개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없어 3개 어업관리단에서는 실효성 없는 영업정지 처분만 반복하고 있으며,
 - 남해단의 경우 보험 미갱신으로 인한 장기간(최대 4년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어선중개업체는 10개 업체로 확인되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규정만 반영, 등록취소 규정 없음
- ➡ **(행정상)** 어선거래자가 어선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어선법」 장기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요구(통보1, 어선안전정책과)
- ➡ **(행정상)** 남해단에서 행정처분하여 장기간 영업정지 중인 어선중개업체에 대한 처분 이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통보 1)

8. 국가어업지도선 의약품 비치 자체기준 마련 필요

- 선박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복지부 고시)」 제2조에 따른 '특수장소'에 해당되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약국 개설자를 의약품 '취급자'로 지정하고,
 - '취급자'는 선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약품을 관리해야 하며, 그 의약품의 종류는 일반의약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해수부 고시 제'21-238호)」 제2조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별표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 별로 선내 비치하고 이상없이 관리토록 규정
 - 그런데 감사기간 중 남해단의 의약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지도선에서 강심제, 지혈제, 수액제, 항생제, 멀미약 등 12종의 의약품이 미비치되고 있었음

선내 취급 의약품중 미비치 약물(지도선 공통)

분류	상품명(예시)	비치기준	단위	비고
강심제	아미노필린注	1/2	★10앰플	미보유
혈관수축제	염산에피네프린注, 에피네프린注	1/2	★10앰플	미보유
국소마취제	리도카인注, 염산리도카인注	1	★10앰플	미보유
지혈제	검빅스注	1/2	★10앰플	미보유
수액제	5%당 링겔, 덱스트란40주사액 등	1	★500ml	미보유
항생제	독시싸이클린하이클레이트 캡슐 등	1/2	★100캡슐(정)	미보유
진훈제(멀미약)	드라마민정, 보나링에이정	1/2	★100정	미보유
관상동맥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 니트로글리세린정	1/10	★100정	미보유
화농성 질환용약	테라마이신외용연고	2	★10g	미보유
	황산겐타마이신연고(크림)	2	★10g	미보유
진통·진양·수 렴·소염제	카라민로손	2	★60ml	미보유
기타피부질 환용약	동상연고	1	★20g	미보유
소독제	요오드틴크, 묽은요오드틴크	1	★120ml	미보유

➡ **(행정상)** 의약품 비치 기준에 따른 약품의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여 자체기준 마련 요구(통보1)

9. 국가어업지도선 단속장비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는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해단은 '20. 6월 단속 장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

* 지도선별 단속장비 현황 관리, 매월 지도선별 자체점검 후 어업지도과 제출, 반기별 어업지도과 주관 단속장비 관리실태 및 실사용 가능여부 종합점검

- 그런데 월간 점검 중 전월 대비 단속장비 보유 수량 변동에 따른 이력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유 수량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단속 장비 점검에 따른 보고 및 검증이 소홀하였고,
 - 매월 점검을 통해 보고된 문제 단속장비에 대한 조치를 반기별 종합점검 수행 때 함께 처리하고 있어, 월간 점검을 통한 문제 장비 사전 발굴 및 대응 효과가 없고 조치 소요일(최소 2일, 최대 197일)도 일정하지 않음
- ➔ **(행정상)** 단속장비 보유수량 변동 등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매월 보고된 문제 장비에 대한 조치는 일정 기간내에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요구(통보1)

10. 무인비행장치 관리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분기별 운용 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후 총괄부서(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고, 생성된 영상자료는 드론영상DB에 저장 및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는 단장 확인 절차가 반영되지 않아 단장 확인 없이 분기별 실적을 제출하고 있고,
- 영상자료를 이동이 가능한 외장형 저장장치에 안전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어 여러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저장하였음

-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에서 보유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반기별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해단은 반기별 종합점검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 **(행정상)** 단장 확인후 운용실적이 제출되도록 상위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개정 요구(개선1)
- ➡ **(행정상)** 반기별 종합점검을 시행하고 영상자료를 전용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 장치 및 안전대책을 마련 요구(통보1)

11. 청사시설 신축공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원) 이상인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現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함
 -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그런데 남해단은 평가 대상인 ‘청사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과 ‘청사시설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기한 내 미실시
 - * 남해단은 '20.11.13. 평가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업무 대행 누적으로 평가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평가를 의뢰했다고 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발주청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 회신
- ➡ **(행정상)** 미실시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통보1)
- ➡ **(신분상)**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요구(주의2)

12. 비상훈련 및 기초안전교육 미이수 선원 승무제한 미실시

가. 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 미실시

-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실시하며, 당해선박의 직원 25%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 이내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1월부터 '23.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궁화 3호 등 지도선 4척은 인사명령으로 직원 25% 이상이 교체되었음에도 출항후 24시간 이내 선내 비상훈련을 미실시(총 5회)하였음

나. 기초안전교육 미이수 선원 승무제한 미실시

-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은 생존기술, 소화, 기초응급처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또한, 「선원법」 제116조에 따르면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함
- 그런데 남해단 소속 선박승무 직원 7명은 '기초안전교육' 유효기간(이수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었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남해단에서도 승무 제한을 검토하거나 승무를 제한하지 않았음
- ➔ **(행정상)** 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을 미실시하고, 기초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직원에 대한 승무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의" 처분(기관주의1)
- ➔ **(행정상)** 기초안전교육을 미이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직원 7명에 대해 기초안전교육 이수 요구(통보1)

13. 정부광고 요청 절차 미준수

-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은 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여야 함
- 그런데 남해단은 해당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20. 1. 1.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광고를 ○○○○에 직접 의뢰하였고,
- '22. 2. 10.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조항을 고지받아 인지한 이후에도 2022. 7. 18.과 8. 1. 정부광고를 ○○○○ 등에 직접 의뢰하였음
- ➔ **(행정상)**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의뢰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 (기관주의1)

14. 분임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시 위원장은 단장,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선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담당자로 구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남해단에서는 선장 대신 안전정보과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였고, 위원 변경(선장→안전정보과장)을 위한 개정 계획은 수립('22.4)하였으나 이후 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안전정보과장을 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음
- ➔ **(행정상)** 분임예산집행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구성을 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요구(개선1)